과연 '중대선거'인가?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결정요인 분석*

이 준 한 |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 경 훈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이 글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투표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전 선거의 그것과 비교하여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제17대 총선이 과연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로 규정될 수 있는지 진단한다.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젊을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클수록, 진보적일수록,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전라도와 충청도 출신일수록, 탄핵에 반대할수록, 그리고 정치인 물갈이가 총선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할수록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이 통계결과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유권자의 연령, 이념, 지역주의 변수가 모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선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결과를 분석해보면 2004년 총선에서 지역주의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매우 제한적 — 울산, 부산과 경남의 일부 정도 — 이다. 그리고 영남지역당과 호남지역당 득표율 차이와 의석점유율 차이를 최근 세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비교해 볼 때 지역주의가 완화되었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또한 여러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세대와 이념에 의하여 중첩된 투표행위가 예전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당간의 "뚜렷하고 지속성" 있는 재편성이라는 케이(V.O. Key)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2004년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간의 재편성은 중대선거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지난 9월 24일 있었던 "제17대 총선과 한국민주주의"라는 학술발표회에서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한 중요한 지적을 아끼지 않았던 장훈 교수와 정하용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I. 머리말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또는 인구사회학적 요소), 정당소속감, 공직후보자의 자질, 선거의 쟁점, 그리고 캠페인 효과 등이 꼽히는데, 한국의 선거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요인들보다 지역주의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를 누구에게 던질 것인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받은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당연하게도 2004년 선거에서 다른 여러 변수보다도 지역주의 변수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작업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주의의 현격한 완화를 가져온 중대선거인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적지 않은 정치인들과 정치학자들은 과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과거 지역주의가 차지했던 자리를 세대에 의한 투표와 이념에 따른 선택이 대체해 나가는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정치학자들은 이번 선거가 케이(V.O. Key)가 1955년 정식화했던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의 하나로서 한국의 선거정치 지형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한다(김영래 2004; 김일영 2004; 김용호 2004). 만약 이번 선거에서 과거에 비해 지역주의에 의한 투표행위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번 총선이 중대선거의 하나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제17대 총선에서 지역주의에 의한 투표결정에 의미있는 변화가 없다면 중대선거로 규정되기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 논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선거에 미친 지역주의, 세대, 이념이라는 요소의 영향을 측정하여 궁극적으로 이번 총선이 과연 중대선거인지 여부를 규명해본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2004년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결정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이 통계분석에서는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센터의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한다. 이 글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주의, 세대, 이념이 끼친 영향을 다각도로 측정함으로써 제17대 총선에서 발생한 변화를 평가한다. 여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몇몇

여론조사기관에 의해 발표된 자료들이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제17대 총선이 중대선거로서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한다.

II. 제17대 총선과 유권자의 투표결정요인

표 1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통계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 통계분석은 흔히 선거연구에서 하는 방식대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2자구도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통계분석에 이용되는 방법은 종속변수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양자택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빗 방법론(probit analysis)을 이용하여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센터가 4월 총선이 끝난 다음날부터 약 일주일동안 실시하여 모은 설문조사자료(N =1500)를 분석한다. 통계모델의 독립변수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정치심리적 변인, 경제선거 변인, 지역주의 변인, 선거 이슈 변인, 그리고 인터넷 영향 변인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독립변수의 평가된 계수들이 양의 부호를 가질 때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도록 코딩을 했다. 이 통계분석에서 이용되는 통계프로그램은 "STATA 7"이다.

표 1에 담겨있는 통계분석 결과는 먼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인들 가운데 연령변수만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려준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연령이 낮은 유권자일수록 열린우리당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컸다. 반대로 연령이 높은 유권자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외의 사회경제적 변인인 교육, 생활수준, 성, 거주지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졌듯이 유권자의 연령차이, 다시 말해 세대별 차이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선택과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표 1에 의하면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권자가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느낄수록 열린우리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유권자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도 자신의 정당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 변수는 0부터 10

표 1. 프로빗 테스트 결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유권자의 선택

변수	계수	표준오차
교육 (1 = 국졸 이하, 2 = 중졸 이하, 3 = 고졸 이하, 4 = 대재 이상)	-.07	.11
생활수준 (1 = 하층, 2 = 중하층, 3 = 중산층, 4 = 중상층, 5 = 상층)	.10	.08
성별 (0 = 여성, 1 = 남성)	-.16	.15
연령대별 (1 = 20대, 2 = 30대, 3 = 40대, 4 = 50, 5 = 60대 이상)	-.16*	.09
거주지 (1 = 지방 소도시, 2 = 중소도시, 3 = 대도시)	-.06	.12
정치적 효능감 (1 = 거의 없다, 2 = 조금, 3 = 중간, 4 = 많다, 5 = 아주 많다)	.12**	.06
진보 - 보수성 (0 = 가장 진보, 10 = 가장 보수)	-.21***	.37
회고적 평가 (1 = 아주 잘못했다, 2 = 잘못했다, 3 = 잘했다, 4 = 아주 잘했다)	.33***	.12
거주지 (전라도)	1.22**	.49
거주지 (경상도)	-.48***	.16
거주지 (충청도)	.80***	.30
탄핵안 (1 = 매우 찬성, 2 = 찬성, 3 = 반대, 4 = 매우 반대)	.76***	.09
세대교체	.26*	.17
정동영의 노인발언	.64	.35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0 = 안한다, 1 = 한다)	-.18	.18
절편	-1.47**	.65
Log likelihood	-201.09	
Prob > chi2	0.0000	
Pseudo R2	0.4525	
N		560

*** p < 0.01, ** p < 0.05, * p < 0.1

까지 가장 진보에서 가장 보수라는 일직선 사이에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이념적 위치를 정하는 것인데 제17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스스로가 진보적이라고 평가할수록 열린우리당에 투표하며 보수적이라고 평가할수록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1의 통계결과는 정치적 효능감과 이념변수가 모두 일반적 예상과 일치되는 효과를 보였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또한 경제선거 변인인 회고적 평가도 유권자의 투표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성과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내리는 유권자일수록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다. 경제선거모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권자는 현 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우호적으로 내리는 경우 집권당을 지지하고 반대의 경우 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에 대한 지역주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거주지를 명목변수(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로 포함시킨 결과 세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알려졌듯이 전라도와 충청도 거주자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경상도 거주자는 한나라당을 지지했다. 보통 지역주의는 다른 도(道)에 거주할지라도 동향출신의 지도자와 정당에 지지를 표하는 것으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번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센터의 설문조사는 예전과 달리 유권자의 거주지에 관해서만 묻고 고향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서 지역주의에 의한 투표행위를 충분히 측정하여 예전의 경우와 비교할 수는 없었다. 비록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거주지와 관련된 이번 통계결과는 지역주의가 여전히 강했음을 알려주었다.[1)]

표 1은 또한 이번 총선에서 선거이슈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큰 결정력을 행사했음을 알려준다. 이미 예상되었고 선거결과상 실제로 확인되었듯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반대하는 유권자일수록 열린우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2004년 벽두부터 일었던 정치인의 세대교체와 물갈이 이슈가 중요하다고 믿은 유권자일수록 역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선거의 말미에 있었던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하발언은 기대와 달리 유권자의 결정

1) 표 1의 통계모델에 유권자의 정당소속감이라는 변수를 포함했을 경우 유권자의 거주지 변수와 상호연관성의 문제(multicollinearlity)에 의하여 거주지변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유권자의 정당소속감 변수를 제외시켜 통계상의 불필요한 문제점을 피했다.

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표 1의 통계분석 결과는 유권자의 선택에 인터넷 효과가 없었음을 알려준다. 유권자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취미 및 친목, 오락, 연애, 학술, 지역사회, 언론, 정치 등)에 참여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선택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근래의 각종 선거에서 인터넷에 많이 노출될수록 선거에 동원되거나 또는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미국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총선에서도 인터넷의 효과가 선거결과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Bimber 2000, 2001). 날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유세와 네티즌의 활동이 커지자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센터도 처음으로 관련 문항을 포함시켰는데, 비단 표 1의 인터넷 커뮤니티 변수 뿐 아니라 유권자의 인터넷 이용 횟수 변수 등도 지지정당을 선택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센터의 설문조사는 표본을 전국의 유권자로 삼고 있다. 반대로 인터넷을 활발히 사용하는 네티즌이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할 경우에는 인터넷의 효과가 본 논문의 결론과 충분히 다를 수 있다.

III. 제17대 총선과 갈등구조의 변화

1. 지역주의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센터의 거주지 변수를 이용한 설문조사의 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 변인들이 유권자의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예년의 설문조사분석에서 유권자의 고향항목으로 지역주의의 영향을 측정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설문조사분석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에 대한 지역주의의 영향이 매우 일관성있고 변함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경우에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완화되었다고 또는 사라졌다고 주장되어 그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주의의 변화를 논하기 앞서 변화여부의 대상이 되는 지역주의란 무엇

을 지칭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논자에 따라 지역주의에 대한 정의가 크게 다를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지역주의라는 용어를 선거라는 공간에 국한시킨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지역주의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호남과 영남지역이 서로 배타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역사적 연원이 오래된 포괄적인 현상이다(김만흠 1994). 그러나 범위와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라는 장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만 논하면 지역주의를 한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 지역 출신의 정치지도자가 소속된 정당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지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측정하기도 쉽고 논의를 전개하기도 쉬운 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의는 한 지역(출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하여 지배력도 크고 그 혜택을 배타적으로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선거에서의 지역주의는 특정 지역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몰표를 받고 다른 정당은 그 특정 지역에서 거의 득표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강원택 2003; 이갑윤 1997).

지역주의에서 지역이란 전통적으로 지역갈등이 심한 호남과 영남을 지칭해왔으며 정치지도자는 호남의 김대중과 영남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지역주의의 등장은 애초에 박정희의 정권창출과 관련이 있었으나 그 후에는 영남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확대재생산 되어왔다. 박정희 정권부터 3, 40년 동안 영남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이 계속 집권함에 따라서 장기간 동안 호남지역은 영남지역에 비해 정치적 혜택을 적게 받았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이 더딘 것을 경험했다. 1987년 이후부터는 양김(또는 3김)의 대결구도와 맞물리면서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골은 더욱 깊어갔다. 전라남도 출신의 김대중과 그의 정당은 호남에서 절대적인 표를 얻었으나 영남에서는 열세를 모면하기 어려웠던 반면, 경상남도 출신의 김영삼과 그의 정당은 영남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보였으나 호남에서는 극심한 부진을 떨칠 수 없었다. 김종필과 충청지역 정당은 1987년 이후 어느 선거에서는 독자적으로, 다른 선거에서는 영남당이나 호남당 중 하나와 연합하여 선거를 치러 왔다.

약 한 세대동안 확대재생산 되어왔던 선거에서의 지역주의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지역주의의 상징적 인물들의 퇴장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지역주의는 김영삼의 퇴장으로 인해 영남 지역맹주의 공백이 황해도 출신의 이회창으로 채워진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전통적으로는 그 지역 출신의 지도자가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패턴에서 일대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2002년 양김시대가 막을 내리고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과 이회창이 예전과 다른 리더십을 바탕으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 전과 비교해서 선거에서의 전통적인 지역주의가 많이 약화되었다. 특히 2002년 선거에서 호남출신이 아닌 영남출신 노무현에 대한 호남유권자의 배타적 지지는 과거와 다른 "전략적" 지역주의라고 규정되었다(손호철 2003).

하지만 지역주의의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해석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정의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이나 노무현이 그 정당의 지역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1997년과 2002년 선거가 전통적인 지역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각 지역정당이 선택한 자기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 지역 유권자의 배타적 지지라는 측면에서는 바뀐 것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이미 앞에서 설문조사의 통계분석결과가 웅변적으로 확인해준 바 있다. 그리고 제15대와 제16대 대통령 선거 설문자료를 통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선거에서 호남유권자가 호남정당에 대한 지지나 영남유권자가 영남에 기초한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었다거나 사라졌다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이준한 2003).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약화되거나 또는 사라져가는 증거로 제시되었던 것은 영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의 득표율과 열린우리당의 득표율의 차이가 예전보다 적어졌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영남지역에서 유권자의 배타적인 투표행위에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이다. 표 2와 같이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대구에서는 35.7%포인트이고 경북에서는 28.8%포인트로 드러났다. 양당의 득표율의 차이는 경남지역으로 가면 더욱 적어진다. 표 2에 의하면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부산에서 13.6%포인트, 경남에서는 13.3%포인트, 그리고 울산에서는 겨우 8.2%포인트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호남지역에서 양당의 득표율의 차이는 영남지역에서의 그것과 판이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득표율 차이는 광주에서 53.9%포인트, 전남에서는 46.1%포인트, 전북에서는 64.5%포인트로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호남지역당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함께 계산하면 호남지역당과 영남지역당의 득표율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한편 2004년 총선의 득표율 차이와 예전 총선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그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4(8)년 전 제16(15)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보면 표 3(4)에서

표 2. 제17대 국회의원선거 (%)

	정당득표율				지역별 정당득표율차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영남 - 호남		호남 - 영남	
	지역구	비례	지역구	비례	지역구	비례	지역구	비례
서울	41.3	36.7	42.8	37.7				
부산	52.5	49.4	38.9	33.7			13.6	15.7
	(94.4)		(5.6)				(88.8)	
대구	62.4	62.1	26.7	22.3			35.7	39.8
	(100)		(0)				(100)	
인천	38.9	34.6	44.7	39.5				
광주	0.1	1.8	54.0	51.6	53.9	49.8		
	(0)		(100)		(100)			
대전	22.4	24.3	45.8	43.8				
울산	36.3	36.4	28.1	31.2			8.2	5.2
	(50.0)		(16.7)				(33.3)	
경기	40.7	35.4	45.7	40.2				
강원	43.3	40.6	38.8	38.1				
충북	32.6	30.3	50.5	44.7				
충남	15.8	21.1	38.9	38.0				
전북	0.1	3.4	64.6	67.3	64.5	63.9		
	(0)		(100)		(100)			
전남	0.8	2.9	46.9	46.7	46.1	43.8		
	(0)		(53.8)		(53.8)			
경북	54.6	58.3	25.8	23.0			28.8	35.3
	(93.3)		(0)				(93.3)	
경남	47.7	47.3	34.4	31.7			13.3	15.6
	(82.4)		(11.8)				(70.6)	
제주	40.2	30.8	49.4	46.0				

주의: 괄호안의 수치는 의석점유율임.

볼 수 있듯이 영남당과 호남당의 득표율 차이가 대구에서 52.0(21.1)%포인트, 경북에서 37.8(33.3)%포인트였고, 부산에서 45.3(49.4)%포인트, 경남에서 41.9(30.7)%포인트, 울산에서는 32.1%포인트였다. 또한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양 지역당의 득표율의 차이는 광주에서 66.6(78.7)%포인트, 전남에서

표 3. 제16대 국회의원선거 (%)

	정당득표율		지역별 정당득표율차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영남 - 호남	호남 - 영남
서울	43.3	45.1		
부산	60.3	15.0		45.3
	(100)	(0)		(100)
대구	62.9	10.9		52.0
	(100)	(0)		(100)
인천	41.7	40.6		
광주	3.3	69.9	66.6	
	(0)	(83.3)	(83.3)	
대전	23.3	28.5		
울산	41.7	9.6		32.1
	(80)	(0)		(80)
경기	39.1	40.9		
강원	38.6	36.5		
충북	30.6	31.3		
충남	17.4	30.0		
전북	3.6	65.4	61.8	
	(0)	(90)	(90)	
전남	4.1	66.4	62.3	
	(0)	(84.6)	(84.6)	
경북	52.5	14.7		37.8
	(100)	(0)		(100)
경남	53.7	11.8		41.9
	(100)	(0)		(100)
제주	44.2	49.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6대 국회의원선거총람』.
주의: 괄호안의 수치는 의석점유율임.

62.3(63.2)%포인트, 전북에서 61.8(40.2)%포인트였다. 따라서 지난 선거들과 비교해서 이번 총선에서 영남당과 호남당의 득표율의 차이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있는 곳으로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꼽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의 양 지역정당 득표율 차이가 예년 선거와 비교하여 상당히 변화된 것으로 생각할

표 4. 제15대 국회의원선거 (%)

	정당득표율		지역별 정당득표율차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영남 - 호남	호남 - 영남
서울	36.5	35.2		
부산	55.8	6.4		49.4
	(100)	(0)		(100)
대구	24.5	1.4		21.1
	(15.4)	(0)		(15.4)
인천	38.2	29.5		
광주	7.5	86.2	78.7	
	(0)	(100)	(100)	
대전	21.5	11.4		
경기	33.2	27.4		
강원	37.3	6.7		
충북	31.5	8.9		
충남	28.9	6.1		
전북	23.5	63.7	40.2	
	(7.1)	(92.9)	(85.8)	
전남	17.7	70.9	63.2	
	(0)	(100)	(100)	
경북	34.9	1.6		33.3
	(57.9)	(5.3)		(52.6)
경남	34.9	4.2		30.7
	(73.9)	(8.7)		(65.2)
제주	46.6	29.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5대 국회의원선거총람』.
주의: 괄호안의 수치는 의석점유율임.

수도 있으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함께 호남당으로 계산하면 이전의 총선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양당의 득표율 차이보다도 의석점유율의 차이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의 변화가 더욱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양당의 의석점유율 차이는 표 2가 알려주듯이 대구에서 100%포인트, 경북에서 93.3%포인트, 부산에서 88.8%포인트, 경남에서 70.6%포인트이다. 이러한 수치는 영남지역에서 2004년에

도 과거 총선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득표율의 차이와 같이 의석점유율 차이에서 큰 변화가 있던 곳은 겨우 울산 하나로서 33.3%포인트일 뿐이다.

범위를 확장하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양당 의석점유율 차이와 예년 총선의 그 차이를 비교해보면 다시 한번 큰 변화가 드러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제16(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구가 100(15.4)%포인트, 경북이 100(52.6)%포인트, 부산이 100(100)%포인트, 경남이 100(65.2)%포인트, 울산이 80%포인트였다. 따라서 의석점유율을 놓고 볼 때 역시 울산을 제외하고는 과거 추세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제17대 선거에서 호남에 기반을 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전남 의석점유율을 함께 감안하면 제17대 호남 지역당의 호남 의석점유율은 오히려 제15대 수준 이상으로 지역성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호남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의석점유율의 차이는 광주와 전북에서 100%포인트이다. 양당의 의석점유율 차이는 전남에서만 53.8%포인트로 나타났으나 열린우리당 및 민주당의 의석점유율과 한나라당의 차이는 다시 100%포인트가 된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남당과 영남당의 의석점유율의 차이는 광주에서 83.3%포인트, 전남에서 84.6%포인트, 전북에서 90.0%포인트였다. 그리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지역당의 의석점유율의 차이는 광주와 전남에서 100%포인트, 전북에서 85.8%포인트였다.

결론적으로 각 지역당의 득표율 차이와 의석점유율 차이를 최근 세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교해 볼 때 지역주의가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울산을 정점으로 부산과 경남 정도로 파악된다. 물론 영남지역의 득표율 차이와 의석점유율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데는 소선거구제라는 제도의 영향이 크다. 현행 소선거구제에 의하여 과거에 비해 영남지역에서 호남 지역당의 득표율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불구하고 이것이 호남 지역당의 영남의석 점유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못 미치는 것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선거에서의 지역주의가 약화되고 있다고 결론짓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지역지도자들의 등장과 그들의 선거에 미친 영향력에서 찾아진다. 전라도에 기반한 열린우리당에서는 2004년 총선 직전 호남 출신의 정동영이 등장하여 선거를 이끌었고 한나라당에서는 영남출신의 박근혜가 등장하여 그

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이 양김 또는 기존의 지역 정치지도자들이 장기간 형성했던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가는 논외로 하지만 그들이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지역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지지를 배타적으로 획득해나가는 과정과 그 효과가 전통적인 선거에서의 지역주의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민주당에서 분당한 열린우리당의 의장으로 정동영이 선출된 후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전북 유권자들은 정동영의 열린우리당에 배타적인 지지를 표하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은 전남지역으로도 급속히 파급되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정동영 의장의 전북에서는 호남당(열린우리당)이 최근 세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 차이와 의석점유율 차이로 영남당(한나라당)을 제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탄핵가결 이후 불어닥친 역풍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이 선택했던 카드는 "영남과 박정희의 향수"를 자극하여 영남유권자의 표를 결집시킬 박근혜를 대표로 뽑는 것이었다. 박근혜대표가 선출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탄핵가결 후 열세로까지 변했던 대구와 경북의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한나라당의 예년 의석점유율을 확보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사이에 각 지역의 표를 그 지역정당 주위로 끌어 모을 수 있었던 것은 2004년이라는 시간적 환경에 맞게 지역정서를 잘 포장시킨 지역주의 선거전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홍덕률 2004).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마지막 이슈는 충청도의 표심이다. 충청도에 아무런 지역적 연고가 없는 열린우리당이 충청도의 지역맹주인 김종필의 자민련을 제치고 대전의 6석 가운데 6석을, 충북의 8석 가운데 8석을, 충남의 10석 가운데 5석을 각각 획득했다. 여기에는 열린우리당의 행정수도 이전공약이 주효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충청도의 지역주의를 호남과 영남에서 보여지는 "맹목적"이고 "즉자적"이며 "직접적"인 배타성에 기반한 지역주의와 구별되는 "실용주의적" 선택에 의한 지역주의 또는 "합리적" 선택에 기반한 지역주의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선거지역주의 정의에 비추어 충청유권자 사이에 자기 지역 정치지도자(김종필)의 소속정당(자민련)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2004년 충청지역의 지역주의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에 의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배타적 선택이 형성된 셈이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첫째, 2004년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득표율의 변동과 의석점유율의 변동을 통해 보면 선거에서의 지역주의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완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둘째, 2004년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보

면 전통적인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정의에 적용될 수 있는 요소들(영남 대 호남의 대결구도; 박근혜와 정동영)과 전통적인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정의로부터 벗어나는 요소들(충청지역의 선택)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 지역에서 배타적으로 특정 지역정당만 의석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정당은 발붙이기 어려운 현상이 재현되었다.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역시 영남지역에서 발붙이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지역주의의 완화나 약화를 주저없이 주장하기 어렵지 않을까? 또한 이번 총선에서 획득한 자민련의 총 4석은 오직 충청도에서 생겼으며 민주당의 5석은 자신의 텃밭인 전남에서만 확보되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2. 세대이슈

앞서 표 1의 설문조사 자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나이가 투표결정을 내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일반적인 관찰이나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결과와 합치한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와 갤럽의 여론조사결과가 담긴 표 5를 살펴보면 연령대에 따라서 선호하는 정당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www.chosun.com 검색일 2004. 4. 21). 다시 말하면 젊은 세대가 열린우리당에 대하여 지지하는 경향이 많았고 기성세대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컸다. 표 5에서와 같이 20세부터 44세까지의 유권자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확실하게 보인다. 그러나 45세부터 59세까지는 약 38%포인트에서 41%포인트 사이의 좁은 벨트 안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선호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은 상태로 점점 격차가 좁혀진다. 마지막으로 그 이상의 연령층부터는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세대에 의한 투표행위는 2002년 소위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 소위 386세대, 네티즌 등의 선거 캠페인에 의하여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보다 더 많이 50대의 노무현을 지지하고, 반대로 나이든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이 60대의 이회창을 지지하는 구도로 나뉘면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2004년 총선에서도 2002년 대선과 유사한 현상이 재현된 셈이다.

표 5. 연령대별 정당지지율(조선일보와 갤럽 4월 21일 여론조사) (%)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20 ~ 24세	38.9	41.3
25 ~ 29세	26.2	47.9
30 ~ 34세	24.2	53.9
35 ~ 39세	28.2	51.4
40 ~ 44세	36.4	44.3
45 ~ 49세	37.6	41.2
50 ~ 54세	38.3	40.2
55 ~ 59세	39.0	38.6
60 ~ 64세	44.1	35.5
65세 이상	54.9	39.2

그런데 세대에 의한 투표행태는 사실 200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 결코 아니다. 1997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젊은 세대는 야당을 더 선호했으며 보수적인 기성세대는 집권여당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정진민 1992). 그러나 1997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부터는 반대로 젊은 세대가 집권 여당을 더 선호했으며 기성세대는 보수 야당을 더 지지했다(정진민 외 1999). 1997년의 정권교체가 세대에 의한 지지정당을 반대로 만든 셈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전에 존재했던 세대에 의한 투표행위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데에는 지역주의라는 요인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다. 첫째, 2000년대 이전의 선거에서는 연령에 기초한 뚜렷한 구분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기존의 선거가 대부분 3자 구도였기 때문에 선거구도가 복잡했다. 이에 따라 젊은 유권자들의 선호도 두 야당으로 갈렸다. 둘째,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선호했던 후보나, 기성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선호했던 후보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나이가 많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세대가 많이 지지했던 대통령 후보가 기성세대가 지지했던 대통령 후보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 반대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결구도가 양자구도로 단순해졌으며 젊은 후보와 젊은 세대의 지지 대 나이든 후보와 기성세대의 지지로 구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에 유래가 없었던 현상으로 언론이 지나치게 크게 "세대갈등"이라고 선정적으로 부각시킨 감이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표들이 모두 세대교체되고 양당이 공히 젊

은 정치인을 대거 영입하여 당의 전면에 내세운 상태에서 세대에 의한 투표 양상은 다시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표 5의 여론조사결과에서도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아주 젊은 유권자들 가운데 한나라당의 지지폭이 커지고 있다. 25~29세 유권자들은 열린우리당에 47.9%, 한나라당에 26.2%씩 각각 지지를 표명하는 등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매우 큰 격차(21.7%포인트)를 보이는 반면 20~24세의 젊은 유권자들은 열린우리당을 41.3%, 한나라당을 38.9%씩 각각 지지하는 등 지지율의 차이가 겨우 2.4%포인트에 그쳤다. 20대 초반은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유권자의 성향과 비슷한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얼마나 더 많이 그리고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젊은 유권자가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나이든 유권자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게 될 지 앞으로 주목된다.

이와 동시에 유권자의 나이와 관련하여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386세대의 지지성향 분화이다. 386세대 안에서도 지지성향에 변화가 일어서 35~39세의 "젊은" 386세대는 열린우리당 51.4%, 한나라당 28.2%로 압도적인 차이(23.2%포인트)를 보이나 40~44세에 들어선 "나이든" 386세대는 열린우리당 44.3%, 한나라당 36.4%로 지지율의 차이(7.9%)가 현저히 줄어든다. 이러한 현상은 나이에 의한 전통적 지지구도와 맞닿아 있는 것인데 20대 초반의 젊은 유권자층의 진입과 더불어 세대에 의한 투표행위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3. 이념이슈

이번 선거에서 이념에 의한 투표행위가 주목을 받는 것은 본격 좌파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앞 표 1의 설문조사 자료분석에서도 유권자의 이념성향에 의한 투표결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한겨레신문과 미디어리서치에 의해 실시된 4월 16일 전국적 설문조사결과(N = 1000)가 담긴 표 6을 살펴보면 이념적 요인에 의한 투표행위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세 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을 담고 있는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25세부터 34세까지의 연령대에서 정점을 이루고 이 연령대로부터 멀어질수록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

표 6. 연령대별 정당지지율 (한겨레신문과 미디어리서치 4월 16일 여론조사) (%)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20 ~ 24세	23.2	44.4	21.4
25 ~ 29세	16.8	47.7	27.3
30 ~ 34세	12.7	48.1	28.0
35 ~ 39세	26.6	45.3	21.2
40 ~ 44세	21.5	41.6	18.6
45 ~ 49세	32.0	36.2	14.9
50 ~ 59세	36.9	40.9	8.2
60세 이상	37.5	37.8	5.2

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반대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는 45세부터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다. 표 6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념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뚜렷하게 감소하지만 이념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반면 이념적으로 가장 중도적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는 젊은 세대가 조금 높지만 전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패턴은 4월 총선에서 진보적인 젊은 세대가 탄핵에 반대하며 동시에 개혁적 성향을 보이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각각 더 선호했고 보수적인 기성세대가 탄핵에 찬성하면서 보수적인 한나라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념에 의한 유권자의 투표행위는 본격 이념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에 성공한데 힘입어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연령과 이념의 상호 연관관계가 유지될지는 이미 앞에서 지적했지만 불확실하다. 표 5와 표 6은 공통적으로 20대 초반의 유권자가 20대 후반의 유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하여 높은 지지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준다. 2004년에 나타난 젊은 유권자의 이러한 새로운 투표행위는 연령에 따른 이념분포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의 세대는 전체적으로는 전교조 세대로 구분되어 전교조의 진보성향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20대 초반의 유권자들은 그들의 성장기 대부분을 한국사회의 물질적 토대발전의 전성기에 보냄으로써 탈정치화와 보수화가 동

시에 진행되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명제가 위협받는 시기가 올 것인지 주목된다.[2)]

이와 동시에 유권자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보수화되는 경향(life cycle effect)의 일단도 드러난다. 조선일보와 갤럽의 4월 21일자로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는 35~39세의 젊은 386세대가 열린우리당을 한나라당과 큰 격차로 지지하나 40~44세에 들어선 나이든 386세대는 작은 격차로 각각 지지했다고 알려준다. 한겨레신문과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도 젊은 386세대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보다 더 많지만 점차 나이든 386세대에 이르면 그 격차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있다. 2004년 선거에서 나타난 젊은 세대의 보수화와 라이프 사이클 효과가 한국 유권자의 연령별 이념적 분포를 어떻게 뒤바꿀지 관심을 모은다.

IV. 제17대 총선과 중대선거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주의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완화되고 있는 중이며 연령과 이념에 의한 투표행위에 있어 예년의 선거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다고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가 될 수 있는가? 이번 선거를 놓고 케이(1955)의 중대선거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이번 선거가 중대선거가 되기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겠다.[3)]

---

2) 이와 관련하여 송호근(2003)은 이 젊은 세대들이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적인 성향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과 대만은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노출되는 예인데 개인의 인권, 자유, 문화, 삶의 질 등이 개인의 생존과 경제보다 더 중시된다.

3) 제17대 총선과 중대선거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다소 길지만 그 주장들을 살펴보면 케이의 중대선거 정의와 다르거나 그 근거가 이 글이 제시했던 것과 상반됨을 알 수 있다. 먼저 김영래(2004, 2)는 "중대선거의 개념을 집권당 행정부와 야당과의 관계에서보다는 의회의 다수당과 행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정국운영에 대한 상황변화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과거의 한국선거에서 나타난 중대선거와는 다른 내용의 중대선거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용호(2004, 1)는 "이번 총선 결과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케이가 중대선거란 정당간의 "뚜렷하고 지속성"있는 재편성이라고 정의하는데 반해 한국의 2004년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간의 재편성은 뚜렷하지도 않고 지속적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너무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다.[4] 먼저 케이는 중대선거를 기존의 갈등구조로부터 "뚜렷한" 탈피에 의한 재편성(a *sharp* alteration of the pre-existing cleavage within the electorate p. 4. 이태릭체에 의한 강조는 필자의 것임)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2004년 선거에서는 기존의 지역주의가 완화된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지역주의라는 현상의 변화가 매우 과도적이었다. 그리고 세대별 투표 성향에 있어서도 예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념에 의한 투표성향도 유권자의 연령 변인과 중첩되어 있는 정도이다.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달리 과거에 비해 뚜렷한 변화는 막상 적었다.

둘째로 케이는 한 선거가 중대선거가 되려면 기존의 정당과 유권자 연합에서 발생된 날카로운 변화가 상당기간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케이 이후의 후속연구들은 최소한 한 세대정도를 기다리면서 중대선거 여부를 관찰하고 1820년대부터 거의 한 세대씩을 단위로 중대선거를 찾아냈다(Carmines 외 1989; Chambers 외 1967; Swain 외 2000). 물론 미국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꼭 한 세대를 단위로 한국의 중대선거를 찾아야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케이가 정식화했던 중대선거를 한국에서 찾기 위해서는 유권자와 정당구조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시발점의 선

1987년 민주화이후에 형성된 소위 '권위주의 계승정당체제'의 종말을 가져 왔다는 점에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s)」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일영(2004, 114)은 "예상대로 17대 총선은 기존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획기적 선거(critical realignment election)였다. 이번 총선을 통해 기존의 한국 정치가 지녔던 지역적, 금권적, 이념적, 성적 담합구조는 상당 부분 깨지거나 깨질 조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소야대 구조도 과거와는 달리 합법적이면서 정당한 방식으로 여대야소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4) 케이(1955, 16)의 정의를 볼 것 같으면 중대선거란 다음과 같다: "A concept of critical elections has been developed to cover a type of election in which there occurs a *sharp and durable* electoral realignment between parties, although the techniques employed do not yield any information of consequences about the mechanisms for the maintenance of a new alignment, once it is formed." (이태릭체에 의한 강조는 필자의 것임).

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래 한국에서 날카로운 변화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변화의 지속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정당의 재편성 또는 유권자와 정당의 연합구도에 있어 변화의 단초는 분명히 존재한다.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루어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바로 그것이다. 그전의 선거에서는 상당 기간동안 경상도와 충청도의 선거연합에 의하여 선거결과가 좌우되었으나 1997년 선거부터는 전라도와 충청도의 선거연합에 의하여 선거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1997년 선거 이후 전라도와 충청도의 선거연합은 2002년 대통령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복되어 그나마 지속성 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일정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한국에서 중대선거를 찾는다면 현재로서는 2004년 총선보다도 오히려 2002년 대통령 선거 또는 더 멀리 1997년 대통령 선거가 케이의 중대선거와 더 가깝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때에도 전라도와 충청도 선거연합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듯 케이가 사용한 중대선거라는 개념에는 유권자 인구의 "날카롭고 지속성"이 있는 재편성이라는 것이 핵심적이다("Central to our concept of critical elections is a realignment within the electorate both sharp and durable." p. 11). 그가 스스로 지적했듯이 이러한 개념에 적합한 이상형(ideal type)을 찾기란 쉽지 않다. 날카로운 재편성의 예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거의 대부분 그 재편성이 단기간에 그쳤고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차별성이 큰 재편성이 미국의 경우 1820년대 이후 성립되어 이후 몇 번의 선거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중대선거라 할 만한 것이 없었다(pp. 8-16). 그가 이러한 조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실은 15페이지 분량의 짧은 논문에서 "날카롭고 지속적인"이라는 단어들(sharp and durable, persist, lasting)을 15차례가 넘게 적어 크게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한국의 2004년의 총선이 중대선거라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V. 맺음말

이 글은 먼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자구도에 초점을 두고 프로빗 방법론(probit analysis)을 이용하여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센터의 설문조사자료(N = 1500)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젊을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클수록, 진보적일수록,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전라도와 충청도 출신일수록, 탄핵에 반대할수록, 그리고 정치인 물갈이가 총선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할수록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이 통계결과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유권자의 연령, 이념, 지역주의 변수가 모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선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이 논문은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주의의 범위와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라는 장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에 한정하고 있는데, 선거에서의 지역주의란 한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 지역 출신의 정치지도자가 소속된 정당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결과를 분석해보면 영남지역당과 호남지역당 득표율 차이와 의석점유율 차이를 최근 세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비교해 볼 때 2004년 총선에서 지역에서의 배타성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매우 제한적 — 울산, 부산과 경남의 일부 정도 — 이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한 호남지역에서의 호남정당의 배타적 득표와 의석점유라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선거에서의 지역주의는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조선일보와 갤럽의 여론조사결과는 2004년 총선에서 연령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유권자가 열린우리당에 대하여 지지하는 경향이 많았고 나이든 유권자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컸음을 확인해준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결과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세 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을 담고 있는데 이념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뚜렷하게 감소하지만 이념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뚜렷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와 이념에 의한 투표행위가 2004년에 등장한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 1990년대에도 보여진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의 2004년 총선이 케이의 중대선거가 되기에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케이가 중대선

거란 정당간의 "뚜렷하고 지속성" 있는 재편성이라고 정의하는데 반해 한국의 2004년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간의 재편성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뚜렷하지도 않고 지속적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케이의 정의에서 의거할 때 한국의 2004년의 총선이 중대선거라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7대 총선이 한국의 정치사, 정당구도, 의회정치에 영향을 크게 미친 "중요한 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이 논문이 의도했던 바가 아니다. 이와 반대로 이번 선거는 1988년 이후 지속되었던 여소야대의 역학관계를 바꾸고 전통적인 선거에서의 지역주의가 적용되기 어려운 현상도 보이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선거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케이가 정식화했던 중대선거라는 개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선거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었다.

참고문헌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김만흠. 1994.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2권, 2215-38.

김영래. 2004. "17대 총선결과와 17대 국회의 과제." 2004 한국선거학회 연례학술회의.

김용호. 2004. "2004년 총선과정과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한국정당학회 춘계학술회의.

김일영. 2004. "17대 총선의 의미와 정당 체계의 재편 전망." 2004 한국정치학회 총선분석특별학술회의.

마인섭. 2003. "정당과 사회균열구조." 『현대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백산서당.

손호철. 2003. "16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발전진로." 『16대 대선의 선거과정과 의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송호근. 2003.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세대, 그 갈등과 조화의 미학』.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윤성이. 2003. "인터넷과 17대 총선." 『17대 총선분석: 대통령 탄핵과 향후 정국의 전망』. 2004 한국정치학회 총선분석특별학술회의.

이갑윤. 1997.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이준한. 2003. "16대 대선의 주요쟁점과 유권자의 선택." 『16대 대선의 선거과정과 의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현우. 2004. "정당투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 『17대 총선분석: 대통령 탄핵과 향후 정국의 전망』. 2004 한국정치학회 총선분석특별학술회의.

정진민. 1992. "한국선거에서의 세대요인."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1권, 1145-68.

정진민 · 황아란. 1999.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정치: 세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2권, 115-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1. 『제16대 총선 투표율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7. 『제15대 총선 투표율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3. 『제14대 총선 투표율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9. 『제13대 총선 투표율분석』.

홍덕률. 2004. "대구 · 경북의 지역주의적 정치행동." 『황해문화』 제44호 가을, 40-60.

Bimber, Bruce. 2000. "The Study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Civic Engagement." *Political Communication* 17, No. 4(October), 329-33.

Bimber, Bruce. 2001. "Information and Civic Engagement in America: The Search for Political Effects of the Internet."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4, No. 1, 53-67.

Carmines, E., and J. Stimson. 1989. *Issue Evolu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Chambers, W., and W. Burnhan. Eds. 1967. *The American Party Systems: Stages of Political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Key, V.O. 1955. "A Theory of Critic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17. 3-18.

Swain, John W., Stephen A. Borrelli, Brian C. Reed, and Sean F. Evans. 2000. "A New Look at Turnover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789-1998." *American Politics Quarterly* 28, No. 4(October), 435-57.

ABSTRACT

The 2004 National Assembly Election: A Critical Election?

Junhan Lee | University of Incheon
Kyung Hoon Leem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essa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voter choices in the 2004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thereby judges whether or not this election could be considered a 'critical election.' Survey data analysis shows that voter age, ideological position, and residential area had significant effects on voter choices in the electi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ata suggest that,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two previous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re was no big change in the strong influence of the regionalism factor. The changes in vote share and seat share suggest that regionalism noticeably decreased only in Ulsan, Pusan, and some Kyungnam areas. Moreo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s in generational and ideological cleavages in the recent elections. Therefore, the 2004 election does not fall within the category of V.O. Key's 'critical election', which means "a type of election in which there occurs a sharp and durable electoral realignment between parties." There was no such sharp realignment in 2004 and it is too premature to call the change, if any, durable.